

● 대학 편입학 규모 대폭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현 대학 1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오는 2006학년도부터 연 2회 실시하던 편입학 시험을 1회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편입학 선발 인원도 1, 2학년 여석을 모두 인정하던 것을 대학에 따라 교수확보율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배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편입학 규모는 지금보다 2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사학분쟁조정위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의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 위촉 위원(임기 2년) 10명과 감사원,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공무원(당연 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법령 위반이나 비리 사실이 확인된 학교법인·대학의 임원·교직원에 대한 승인 취소나 징계를 비롯하여 임시 이사의 추천·선임·해임, 임시 이사 파견 대학의 사후 관리, 사학분쟁의 원인 분석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자문 역

할을 하게 된다.

올 8월 현재 분쟁으로 인해 임시 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전문대학 5개교와 4년제 대학 13개교 등 모두 18개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사학분쟁을 더욱 적극 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 사학분쟁조정위를 법적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립대 한의학과 1곳

2005학년도 개설 추진

2005년도부터 국립대에 한의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학년도 국립대 한의학과생 정원 배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며 "한의사 수급 상황을 감안해 국립대 한곳에 한의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가 한의학과를 신설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서울대는 한의학과 신설의 타당성을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북대, 충북대 등 10곳이 넘는 지방 국립대는 한의학과 신설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11개 사립대의 한의학과 입학정원은 750명이고, 6월말 현재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모두 1만4480명이다.

● 약학대, 2006년부터 6년제로

현행 4년제인 약학대학의 학제가 2006년부터 6년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약사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6년부터 약대 학제를 6년제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기원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목표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6학년 신입생부터 6년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 "학제가 연장되면 2005년 신입생이 졸업한 이후 2년간 약사 수급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인 실무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약학과 생명과학분야 등 신지식 습득을 통한 약사교육의 내실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의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학제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과 유럽 등은 대부분 약대를 6년제로 운영하

고 있고, 일본도 최근 6년제로 개편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약대 6년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시행은 한약조제권마저 약사들이 차지하려는 의도"라며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지방대 인재할당제 내년부터 시행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대학 출신자 취업의 인재할당제'와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날 광주·전남 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지방발전을 위하여 "우선 지방대학 출신자 취업의 인재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분야부터 정말 확실하게,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회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인재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서 지방대학에게 졸업정원비율에 최대한 가깝

도록 채용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올러 "지방대학이 연구개발 투자의 개발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대학과 손을 잘 잡은 기업이 더 빨리 성공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학교육과정 개선의지 표명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과 산업 간 연계문제와 관련, "대학교육이 생산과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며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기술교육과 연구개발교육에 치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학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26%에 불과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이같이 말하고, "나도 대학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으며, 아주 집중적으로 독려·확인하여 앞으로 5년 동안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대학의 기술교육과 연구개발교육에 기존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최대한 이동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을 잘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성공하는 결

합관계를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혔다.

● 대학총장선거 학생·교직원 투표권 제한 "평등권 제한 아니다"

대학총장 직접선거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며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당수 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총장 선거의 투표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총장선거 때 학내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며 한 국립대 직원 하모씨가 낸 진정에 대하여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원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은 적법하며 일반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학자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행

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부교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해 총장선출 과정에서 직원 등의 참여를 놓고 홍역을 치른 대학은 약 5개 대학 정도이며, 이곳에서는 총장 선거권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의 반발이 거세 후보자 토론회와 선거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한편 강릉대·경북대·군산대·부산대·상주대·서울시립대·안동대·조선대 등은 총장선거 때 교직원이나 학생 등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주고 있다.

●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

앞으로 대학이 기업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계약학과'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학교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계약학과와 경우 산업체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형 원칙과 방법이 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 외로 운영된다. 학교기업은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학과 및 분야에 적용된다.

대학들은 또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 학교기업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체 회계 처리해 관리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이나 교수 연구 활동을 통한 지적재산권 등 교내 모든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대학 별도회계로 처리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학교법인 설립 허가 요건 및 절차 강화 계획**

지난 1996년 대학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뒤 대거 허가된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가 아직 학교

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에도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 설립을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은 모두 91개이며, 이 가운데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 법인은 이사장이 대학 설립 계획을 이용하여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일부는 건축공사 대금문제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이 부실 법인이 난립하게 된 것은 1996년 규제완화를 위한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후 법인 재산 확보계획 등 대학설립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설립을 허가한 데다 계획 불이행시 제재규정도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실법인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후 해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

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10월까지 이들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3월까지 이들 법인에 해산명령을 할 계획”이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도 개정해 학교법인 설립 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교육 산학일체형 재편

앞으로는 대학의 구조와 학사 운영체제가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고 연구물을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또, 교수가 기업체에 파견되고 기업이 학교에 필요한 학과의 설치와 교육내용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산학협력도 추진된다. 대학이 기업에 출자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학 총·학장, 경제단체장,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이런 내용의 ‘신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보고에서 “2만 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이 경제도약을 주도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의 방향을 취업 연계형 맞춤형 교육, 연구개발의 상업화, 산학협력, 창업 등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의 방향이 이른바 ‘산학일체형’ 또는 ‘산학밀착형’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를 위하여 내년부터 시·도당 1~3개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해 정부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묶어 이들 대학에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학교마다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수를 두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강의를 줄여 주거나 산학협력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수의 기업체파견이나 겸직도 적극 장려된다.

이올러 자동차정비학과가 자동차정비업소 등 학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기업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 대학에 특정 교육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주문하거나 특정학과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산학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 시간강사 처우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에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 교육예산액 GDP 대비 5%

첫 돌파

교육예산액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넘어서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의 24조 3739억 원보다 약 2조 원(8.1%) 늘어난 26조 3904억 원(GDP 대비 5.02%)으로 정부 수립 이후 GDP 대비 5%를 처음으로 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예산 증가액은 본예산 기준 정부예산 순증가액 약 6조 원의 33%에 해당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에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8342억 원을 지원하고 의무교육 실시 대상을 중학교 1, 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4만 4493명의 만 5세 아동에게 242억 원, 만 3, 4세 저소득층 유아 2만 1515명에게 77억 원을 지원한다. 장애 유아가 일반 사립유

치원에 입학하면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 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특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2200억 원이 투입된다.

● 국·공립대 이사위, 여교수 참여 의무화

10월부터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인사위원회 참여가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국·공립대학 인사위원회에 여성교수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에 관련 학칙 개정 및 여성위원 위촉을 법 시행전에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대 인사위는 전문대의 경우 16개교 중 9개 대학이, 4년제 대학은 46개교 중 15개교가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 전체 인사위원 중 여성의 비율은 4년제 대학은 705명 중 58명(8.2%)에 그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국립대 주요 행정 보직 및 위원회의 여성 교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여성부는 올해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목표 비율

을 32%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교육시장 전면 개방

세계무역기구(WTO)의 교육시장 개방협상과 별개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시장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전면 개방된다.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 외국 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에 들어서는 외국 학교는 국내 교육법을 적용 받지 않고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도 있으며, 내국인도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을 발표했으며, 이 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지만, 교총·전교조 등 교육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초·중·고 및 대학 모두 허용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평생교육시설과 학원만 일부 개방하기로 한 것과 달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광양·부산(광양·부산은 지정 예정)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 제주도에는 대학만 설립할 수 있다.

이 곳에 들어서는 외국 학교는 원칙적으로 분교의 형태이며, 설립주체가 외국 정부나 자치단체일 경우 분교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이들 교육기관에는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과정 편성, 신입생 선발방법, 운영 등은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국내 교육기관과 똑같은 학력이 인정되고 법인세·소득세 등도 면제받는다.

학교 건물도 임차가 가능하도록 했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송환도 허용했다.

• 설립 잇따를 듯

건물을 빌려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등 학교설립조건이 크게 완화되었고 송금도 허용되어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이미 미국·중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대만·싱가포르 등 10개국이 대학 개방을 요구하는 등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교육시장이기 때문이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중국·뉴질랜드·대만 등은 초·중·고등학교의 개방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서 정부는 외국 학교의

설립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학술연구비 지원 등 재정적인 도움도 줄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교육계 판도 변화

국내 대학들은 당장 우수한 신입생을 뽑기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의 유명 대학이 분교를 세울 경우 국내 대학의 서열까지 바뀔 전망이다.

자녀를 외국 초·중·고등학교에 보내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게 생겼다. 지금도 연간 1만5천여 명 이상의 초·중·고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가는데다 이 가운데 절반은 불법유학일 만큼 학부모들의 외국학교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단숨에 특수목적고에 버금가는 명문고로 떠오를 전망이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법안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을 위한 외국학교특구가 될 것”이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입법을 막겠다”고 말했다.

● 11개 교대 정원 1천 명 증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 뽑는 2004학년도 11개 교육대학 신입생을 애초 5015명에서 5615명으로 600명, 2005학년도에는 5415명으로 400명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계약직 교사 확대 등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림부 주체로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농어촌 교사의 주거편의, 근무 수당, 복식수업 수당 등을 우대하는 방안과,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 무형문화재, 대졸 이상 외국인 등을 농어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약직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 교대 특별편입생-일반졸업생 임용시험 분리시행

11월 23일 예정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사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국 6개 도(道)에서 양성 중인 교대 특별편입생 2500명과 일반졸업생의 시험이 분리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특별편입생과 일반졸업생의 임용시험 분리 시행 등 3개항

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올 임용시험에 대해 “가급적 임용은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시험, 발령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한다”고 합의, 특별편입생들의 분리 실시 요구를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또 “시험과목은 가급적 교대졸업생과 같이 하되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대와 합의하여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합의,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원임용공동관리위원회 시험 외에 별도 시험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전원 임용 요구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경기도의 올 순수 결원 1600여 명과 앞으로 결정될 초등교원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전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원 우선채용 불의 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복무 중 교원임용제도가 변경되어 국·공립 사립대를 졸업하고도 교원 우선채용 혜택을 받지 못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 회원 150명에 대하여 구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균미추' 회원 65명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1990년 교원임용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 임용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하였다.

●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전면 개편 추진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기존 정책 대상 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부조직을 인적자원 총괄 부처의 면모에 맞게 손질하고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리에 따라 규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현재 대학과 성인교육 업무 등을 총괄해 온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이 인적자원개발조정국과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 등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학과 성인 등 정책 대상 중심의 조직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바꾸어 인적자원개발 총괄 부처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관련 정책에 관한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초안 발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학원에 대한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한 현재 6-3-3년제인 초·중·고등학교 체제를 6-4-2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초·중·고등학교별, 가정형편별, 성적별로 학생들을 세분화하여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마련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배포한 공청회 자료에서 사교육의 문제점을 교육·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원인을 교육체제 내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한 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교육개발원은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전인적 성장 저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

량 및 창의력 저하 ▲훈련으로 인한 학습 의욕 저하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방해 및 학교 수업 소홀 등을 꼽았다.

또 사회적 측면 문제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기회 불평등 발생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및 사회 통합 저해, 경제적 측면 문제로는 ▲가계부담 가중으로 인한 가계 부실 초래 ▲중복 투자 및 소모적인 과외비 지출로 인한 국가경제 왜곡 등이 지적되었다.

교육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 및 원인 분석을 토대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사교육 기관의 역할 정립 ▲학부모 의식 및 사회풍토 개선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교육개발원은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 방안 중 단기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대신 20~30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 실시를 제안했다.

또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 및 자격 기준을 해당국이 사전에 제시하고 그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화·특성화를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

학교 단계 경시대회의 점진적 폐지도 제안했다.

교육개발원은 또 '사교육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교육 기관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면허제 도입과 학원 수업료 표준가격화 및 카드결제 의무화, 사교육기관에 대한 허가제와 인증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교육개발원은 이어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 방안 중 '교육평가 체제 개선'에서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 모든 교과를 평가하지 않고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핵심 교과와 보완 교과로 구분, 핵심 교과만 평가하고 일반계고등학교 내신에서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제외 또는 일부 과목만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현행 점수 위주의 서열평가에서 모든 과목에 대하여 국가 수준 성취도 기준에 의해 평가(Pass/Fail 실시)로 전환하는 방안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체능 평가도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하여 10월 14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내용에 대하여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으로 근본적 대책이 아닌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측은 "교육개발원의 제안은 '경쟁'과 '선발'을 강조하는 교육 시장화 원리에 치우쳐 현행 대학 서열화 체제를 중·고등학교 교과까지 확산시키자는 것"이라며 "이는 입시경쟁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개발원의 방안대로 수능 점수제를 폐지, 등급제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의 서열 전형이 불가피해지고 '6-4-2 학제'는 고등학교를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등 입시경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학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 반영비율을 줄

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미술·음악·체육교사 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든 예체능 교과교육 정상화든 어떤 이유라도 예체능 교과만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학·학과별 취업률 공개 추진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교육과 학사운영을 산업 수요에 맞추도록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과 취업수준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대학별 졸업자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넘겨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취업현황과 노동 이동경로를 확인, 대학과 학과별로 취업률 및 취업수준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부응하는 학사운영을 위하여 정원과 학제·휴학요건을 유연화하고 재학 중 산업현장 연수시 학점인정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강구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대졸예정자 48만 명으로부터 일제히 구직등록을 받아 채용하려는 기업과 연결하고

정보기술(IT) 고급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비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졸업예정자나 채용예정자에 대해 자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1인당 훈련수당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휴학생 등록금 납부규정 무효, 대학에 수정 권고**

학기 중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대학의 학사 규정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모 대학교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가운데 등록금 관련 조항을 심의한 결과 이들 조항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정,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효 판정을 받은 규정은 휴학생이 개학 1개월이 지난 뒤 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한 규정과 개학 1개월 후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고 당해 학기 내에 군대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등록금 납입 후 그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지만 부산 모 대학과는 달리 상당수 대학이 학기 중 휴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거나 해당 학생이 복학할 때 등록금의 일부만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 **고교평준화정책 계속 유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평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이미 공청회 등을 거쳐 평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또 평준화 체제에서 미흡한 부분은 특성화고교나 자립형사립고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최근 교육계 일부에서 학교 발전과 입시 개혁 등을 위하여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부교

육감회의 회의 뒤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도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확대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을 통해 평준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 후 추첨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 **내년도 교원 임용시험 면접·실기 비중 늘려**

앞으로 교원임용시험에서 면접 및 실기고사 비중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의 1백50%까지 확대되고 면접시간이 현행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임용 시험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하여 200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면접·실기고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학과 전공 필기시험으로 선발하는 1차 합격자가 현행 1백20%에서 내년에 1백

30%로, 2005학년도 이후에는 1백50%로 확대된다. 다만 초등학교원은 현행대로 1백20%가 유지된다.

● 발전계획추진 우수 국립대 400억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43개 국립대(산업대·교육대 포함) 자체 발전계획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대학으로 평가된 전남대 등 24개 대학에 250여억 원 등 모두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비해 마련된 '국립대 발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교육

인적자원부는 지난 7~8월 각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 추진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일반지원으로 43개 대학에 148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국립대 기능분화 및 연계체제 구축' 등 3개 영역평가에 따른 선별지원으로 추진 실적이 우수한 24개 대학에 251억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대학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규모 일반대와 소규모 일반대, 산업대, 교

육대로 나누어 이뤄졌으며, 각 그룹별로 5~7개교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대규모 일반대에서는 전남대가 '국립대 기능분화 및 연계체제 구축' 등 2개 영역에서 우수대학으로 뽑히는 등 6개교가, 소규모 일반대에서는 공주대 등 7개교, 산업대는 한밭대 등 5개교, 교육대는 춘천교대 등 6개교가 선정되었다.

이들 대학에는 선정영역마다 대규모 일반대는 15억8천400만원, 소규모 일반대 8억6천800만원, 산업대 8억2천700만원, 교육대는 4억900만원이 지원된다.